



제 309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

**도 시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박경원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남양주시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
거 레저도시 남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교통난 해소, 시민들
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안전한 통행 확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함
- 나.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축
제, 자전거의 날 행사 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다. 자전거 수리센터 명칭 변경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자전거 교통
안전 체험장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도로관리과
- 라. 입법예고 : 2025. 1. 24. ~ 2025. 1. 31. (7일간)
-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이 꾸준히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편의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 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와 제9조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 범위 확대와 자전거 수리와 자전거수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을 설치·운영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 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동 조례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에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